

# 도·도교육청, 농촌유학 활성화 T/F 본격 가동

도·도교육청·시군·교육지원청 참여 킥오프 회의… 2학기 서울학생 대상 농촌유학생 유치 시범운영·전국 성공모델 만들기 '총력전'

전북도(도지사 김관영)와 전북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농촌유학 활성화 T/F를 구성하고 농촌유학 사업사업 추진을 위해 본격적인 협치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전북도는 도청 종합상황실에서 도와 도 교육청, 시·군 사업부서 팀장과 교육지원청 장학사 등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촌유학 TF 회의를 열고 지방 소멸과 인구 감소에 대한 농촌유학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과 기관별 추진사항 등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전북도·도교육청·서울시교육청·제경전북도민회와 8월 말에 체결하는 농촌유학 협약에 관한 사항과 지난 7월 김관영 도지사의 운주농촌유학센터 현장 방문 당시 견의된 사항에 대해 교육청과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완주, 진안, 임실, 순창 등 4개 시군 6개 초등학교가 참여할 2학기 농촌유학 시범사업과 관련, 준비사항과 추진계획 등을 논의했다.

이날 TF 회의에서는 △폐교부지

를 활용한 전북형 농촌유학 복합센터 건립, △농촌유학 기간 3년 이상의 장기 운영, △도시 학생이 농촌학교에서 일정 기간 정규 수업을 받을 수 있는 교환학생 제도 활성화 등에 대한 논의가 심도 있게 이뤄졌다.

/김경수 기자

이에 앞서 지난 8월 10일 서울시 교육청 관계자와 교장, 교사 등이 진안군 조립초, 완주군 동상초등학교와 도내 농촌유학센터를 방문해 농촌유학 시범학교와 농촌유학센터의 준비상황 등을 점검했다.

전북도는 이날 T/F 창수회의를 시작으로 농촌유학 시범사업 시행 전까지 TF 공동운영을 정례화할 예정이다.

신원식 전북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전북도와 도 교육청의 협치를 통해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운영하여 전북도 농촌유학이 전국적인 성공모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이를 위해 도는 가족체류형 거주시설 확충과 농촌유학을 위한 특화된 프로그램 지원 등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경수 기자

## 도, 청년 눈높이 맞는 일자리 발굴 위해 '머리 맞대'

도·청년허브센터, 청년정책포럼단 등 20여명… 청년유입·정책 위한 일자리사업 추진방향 논의

전북도(도지사 김관영)가 도내 청년 일자리 실태를 분석하고 새로운 정부의 정책방향과 청년의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 발굴을 위해 청년들과 머리를 맞대는 시간을 가졌다고 11일 밝혔다.

도는 청년들로 구성된 청년정책포럼단과 청년허브센터 등 관계자 등 20여명이 함께 공유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청년유입·정책 위한 일자리사업 추진방향 논의하고, 곧 추진되는 행안부 등 중앙부처의 '23년 청년일자리 공모사업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청년이 도내 거주하면서 느꼈던 애로사항과 도에 바라는 청년일자리 정책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며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

특히, 참석자들은 단순히 청년 일



자리 수를 늘리기보다 청년들이 지역에 적극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발굴하는 방안에 초점을 두고 논의했다.

도는 오늘 논의된 청년들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시군·일자리 유관기관 그리고 전문가 등과 함께 몇 차례 더 고민하는 자리를 갖고 다양

한 청년 욕구에 부응하는 정책적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청년을 신규 채용하면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행안부 공모사업·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의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선정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며, 청년이 선호하는 기업에게 청년을 매칭해 주는 '청년친화기업 일자리 매칭사업'은 꾸준히 기업의 참여를 통한 지속 가능한 일자

리 창출을 적극 유도하기 위해 지원책도 대폭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중에 있다.

특히, 청년들에게 실무 체험과 진

로탐색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 중인 '청년인턴 사업'을 신임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대폭 확대하고, 타 지역으로 떠났던 청년의 U턴을 지원하는 신규사업 추진도 구상하고 있다.

한편, 도는 올해 청년실업과 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청년들의 취업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57개사업

에 1,033억원을 투입하여 8,300명의 청년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있다.

윤동욱 전북도 일자리경제본부장은

며 "청년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다양한 청년 욕구에 부응하는 정책

적 지원을 통해 청년들이 지역에서 일자리를 갖고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경수 기자

해 11월에 암류를 해제할 예정이다. 다만, 암류 해제 후 5년 동안 체납자의 부동산 등 재산 취득을 수시로 조사하며, 새로운 재산 취득 시에는 즉시 암류 조치 등 체납처분을 진행 한다.

이에 전북도는 시군 의견수렴 결과

를 토대로 체납처분 중지 대상 세부

기준을 정하고, 시·군은 대상자를

검토·선정 후 지방세 심의위원회

의 결의를 거쳐 1개월간 공고한 후, 을

시 않으면서 3년간 운행 사실이 없는 차량이다.

이에 전북도는 시군 의견수렴 결과

를 토대로 체납처분 중지 대상 세부

기준을 정하고, 시·군은 대상자를

검토·선정 후 지방세 심의위원회

의 결의를 거쳐 1개월간 공고한 후,

을

시 않으면서 3년간 운행 사실이 없는 차량이다.

이에 전북도는 시군 의견수렴 결과

를 토대로 체납처분 중지 대상 세부

기준을 정하고, 시·군은 대상자를

검토·선정 후 지방세 심의위원회

의 결의를 거쳐 1개월간 공고한 후,

을

시 않으면서 3년간 운행 사실이 없는 차량이다.

이에 전북도는 시군 의견수렴 결과

를 토대로 체납처분 중지 대상 세부

기준을 정하고, 시·군은 대상자를

검토·선정 후 지방세 심의위원회

의 결의를 거쳐 1개월간 공고한 후,

을

시 않으면서 3년간 운행 사실이 없는 차량이다.

이에 전북도는 시군 의견수렴 결과

를 토대로 체납처분 중지 대상 세부

기준을 정하고, 시·군은 대상자를

검토·선정 후 지방세 심의위원회

의 결의를 거쳐 1개월간 공고한 후,

을

시 않으면서 3년간 운행 사실이 없는 차량이다.

이에 전북도는 시군 의견수렴 결과

를 토대로 체납처분 중지 대상 세부

기준을 정하고, 시·군은 대상자를

검토·선정 후 지방세 심의위원회

의 결의를 거쳐 1개월간 공고한 후,

을

시 않으면서 3년간 운행 사실이 없는 차량이다.

이에 전북도는 시군 의견수렴 결과

를 토대로 체납처분 중지 대상 세부

기준을 정하고, 시·군은 대상자를

검토·선정 후 지방세 심의위원회

의 결의를 거쳐 1개월간 공고한 후,

을

시 않으면서 3년간 운행 사실이 없는 차량이다.

이에 전북도는 시군 의견수렴 결과

를 토대로 체납처분 중지 대상 세부

기준을 정하고, 시·군은 대상자를

검토·선정 후 지방세 심의위원회

의 결의를 거쳐 1개월간 공고한 후,

을

시 않으면서 3년간 운행 사실이 없는 차량이다.

이에 전북도는 시군 의견수렴 결과

를 토대로 체납처분 중지 대상 세부

기준을 정하고, 시·군은 대상자를

검토·선정 후 지방세 심의위원회

의 결의를 거쳐 1개월간 공고한 후,

을

시 않으면서 3년간 운행 사실이 없는 차량이다.

이에 전북도는 시군 의견수렴 결과

를 토대로 체납처분 중지 대상 세부

기준을 정하고, 시·군은 대상자를

검토·선정 후 지방세 심의위원회

의 결의를 거쳐 1개월간 공고한 후,

을

시 않으면서 3년간 운행 사실이 없는 차량이다.

이에 전북도는 시군 의견수렴 결과

를 토대로 체납처분 중지 대상 세부

기준을 정하고, 시·군은 대상자를

검토·선정 후 지방세 심의위원회

의 결의를 거쳐 1개월간 공고한 후,

을

시 않으면서 3년간 운행 사실이 없는 차량이다.

이에 전북도는 시군 의견수렴 결과

를 토대로 체납처분 중지 대상 세부

기준을 정하고, 시·군은 대상자를

검토·선정 후 지방세 심의위원회

의 결의를 거쳐 1개월간 공고한 후,

을

시 않으면서 3년간 운행 사실이 없는 차량이다.

이에 전북도는 시군 의견수렴 결과

를 토대로 체납처분 중지 대상 세부

기준을 정하고, 시·군은 대상자를

검토·선정 후 지방세 심의위원회

의 결의를 거쳐 1개월간 공고한 후,

을

시 않으면서 3년간 운행 사실이 없는 차량이다.

이에 전북도는 시군 의견수렴 결과

를 토대로 체납처분 중지 대상 세부

기준을 정하고, 시·군은 대상자를

검토·선정 후 지방세 심의위원회

의 결의를 거쳐 1개월간 공고한 후,

을

시 않으면서 3년간 운행 사실이 없는 차량이다.

이에 전북도는 시군 의견수렴 결과

를 토대로 체납처분 중지 대상 세부